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

GEPS ANNUAL REPORT

20
23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

GEPS ANNUAL REPORT

20
23



공무원연금공단

목 차

CEO 메시지	04
공단의 전략체계	05
한눈에 보는 공무원연금(2023)	06
2023년 주요성과	08

1. 공무원연금 및 재해보상제도

1-1 제도개요	18
1-2 발전과정	20
1-3 재정전망	26
1-4 운영구조	27

2. 공무원연금공단

2-1 공단개요	30
2-2 사업구조	31
2-3 주요사업	32



3. 공무원연금기금

3-1 기금개요	40
3-2 운용성과	47

4. 주요통계



CEO 메시지



1960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공무원연금 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1982년 공무원연금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창단 후 42년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 공단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창단 당시 2천명 수준이던 연금수급자는 66만명 수준으로, 67만명 수준이던 재직공무원은 129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또한 효율적 운용을 통해 기금규모가 5,490억원에서 15조 6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업과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단은 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 임대주택 등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ESG경영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가능한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노력과 성과를 「2023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연금 재정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의 목소리로 통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잘 대처해 나가면서 공무원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단의 전략체계

미션

안정적인 **연금복지서비스**로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회기여**를 돕는다

비전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핵심가치



신뢰와 공정



혁신과 전문성



존중과 배려

경영방침

소통과 공감의 **조직혁신**

국민눈높이 **윤리경영**

전문성 지향 **인재경영**

고객중심 **적극행정**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건설하고 선도적인 연금운영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정립
- 디지털 기반 연금서비스 혁신
- 성과중심 금융자산 운용 강화

안전한 공직사회 지원

- 공무원 맞춤형 재해예방 체계 확립
- 공상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
- 효율적인 종합 재해보상서비스 기반마련

실용적 종합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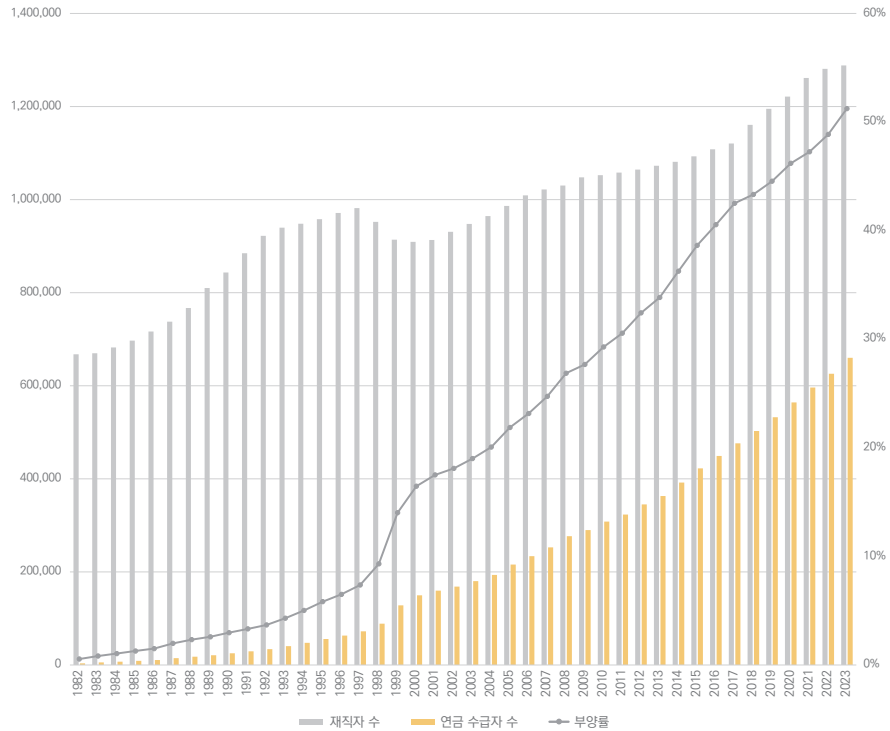
- 편리하고 실용적인 생활복지서비스 확대
-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실현
- 체계적이고 도움되는 퇴직지원 활성화

지속가능한 경영혁신

- 경영효율화 및 전문역량 강화
- 사회적 책임 확산 및 윤리경영 내재화
- 미래성장을 위한 지속혁신

한눈에 보는 공무원연금(2023)

재직공무원 및 연금 수급자 현황



수지구조

(단위 : 억원)

■ 수입
■ 지출

퇴직급여 (정부+공무원 공동부담)

개인기여금 + 정부부담금 139,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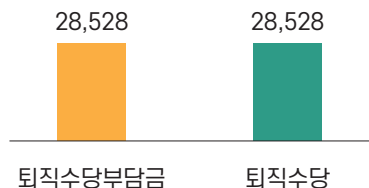
정부추가부담금(보전금) 58,766

연금이체부담금 등 3,946

퇴직연금 196,065

퇴직일시금 등 5,879

퇴직수당 (정부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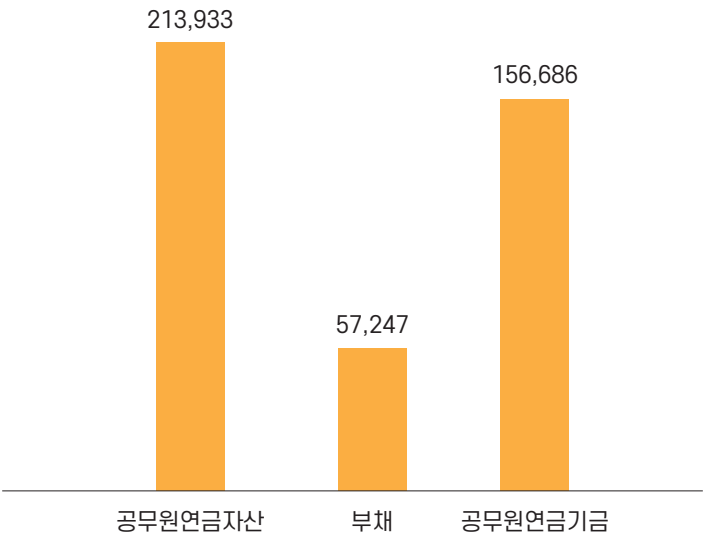


재해보상급여 (정부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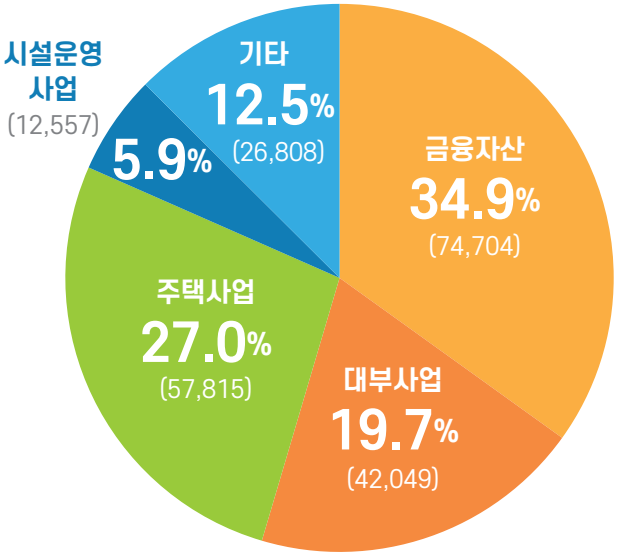
재무상태

(단위 : 억원)



자산구성

(단위 : 억원)



2023년 주요성과

2023 Best Practice


경영관리 우수성과

1 신임 기관장의 경영철학을 녹여낸 G·E·P·S 리더십 제시 및 미래 新사업 발굴

▶ 신임 기관장의 경영철학과 대내·외 의견을 반영한 新 가치체계 수립 및 리더십 제시

핵심성과

- 연금복지전문기관의 비전·전략 실현을 위한 新가치체계 설정
- 미래도약을 위한 G·E·P·S 리더십 제시

	기관장 경영철학 (‘23.8. 취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강화) 공단의 전문역량을 쌓아 공단 사업별 업무수준을 한단계 도약• (책임행정 실현) 업무전반에 청렴의식과 책임행정을 통한 고객신뢰를 제고• (열린 조직문화)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수평적 열린 조직문화 조성			
	New 미션	안정적인 연금복지서비스로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New 비전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New 핵심가치	혁신과 전문성		행복과 책임		
	New 경영방침	최고지향	미래대응	평생동행	함께성장	
		전문역량 강화	혁신·성장동력 확보	고객만족 제고	참여·협력 확대	
의견 수렴	(내부) 미션·비전 개선 워크숍, 직급별·노조 의견수렴, 선호도조사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국민 선호도 조사					
대내·외 환경분석		+	CEO 경영철학		+	국민, 고객의 소리

New 리더십	G Growth	E Ethics	P Professionalism	S Sustainability
	혁신경영을 통한 미래 성장 후생복지 마스터 플랜 마련 및 新사업 발굴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청렴·윤리 & 책임경영 청렴과 책임행정을 통한 고객신뢰 확보	사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성 상생연금개혁 및 종합 재해보상서비스 구축	국민과 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성 ESG경영 및 혁신창출 조직문화 조성

핵심성과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개선(2건 신규발굴, 4건 개선·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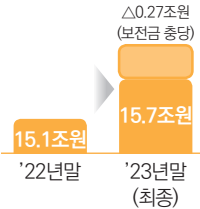
▶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미래 신규 복지사업 발굴·추진

기존 선정사업 점검		추가 신규사업 발굴	최종선정	추진계획 수립
• '22년 선정사업 5개 검토		• 수요 및 경영전략 변화 반영	• 미래성장기여도 등 점검	• 추진 로드맵 수립
구분	사업명	선정 이유		전략과제 연계
신설	① 공무원 복지기금 조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연금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추진 한계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별도채원 필요 		7. 수요변화를 반영한 생활복지서비스 확대
	② 퇴직인력뱅크를 활용한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 수 증가 및 소득공백 기간 동안 일자리 지원 필요 •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등 인력매칭 지원 		9. 고령사회 퇴직지원 활성화
개선	③ 노후 준비 종합 플랫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부터 퇴직 이후까지 포괄하는 연금서비스 확장 가능 • 자체설문조사 결과 공단 수행 필요 의견 89.4% 		1. 전문성 기반 고품질 연금서비스 혁신
	④ 퇴직공무원 맞춤형 실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사회 실버상품·서비스 수요 증가(실버·요양타운, 추모공원 등) • 연금수급자 대상 유료화 서비스로 복지재원 확보 선순환 마련 		7. 수요변화를 반영한 생활복지서비스 확대
	⑤ 공무원 평생교육 종합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사회 교육 콘텐츠 및 온·오프라인 채널 확대 • 사이버 평생 교육원으로 발전 등 전문 교육기관으로 성장 		9. 고령사회 퇴직지원 활성화
	⑥ 공무원 맞춤형 요양케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케어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위한 신규 역량 확대 필요 		6. 공상공무원 재할·직무 복귀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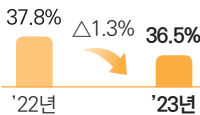
핵심성과

최대규모 보전금 총당

- 역대 최대 금액인 2,733억원을 보전금으로 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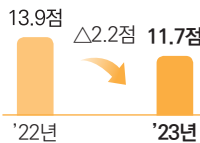


역대 최저 부채비율 달성



핵심성과

갑질지수 감소



- 이해충돌 주요위반 ZERO

핵심성과

- 2050 탄소중립 대내외 선언(적극적 실행의지 표명)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LACP* Awards 금상 수상 (글로벌 간행물 평가기관)

-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중장기 감축목표 및 연도별 시나리오 수립

2 금융자산 수익률 11.5% 실현, '06년 이후 최고 성과 달성

자산배분 노력	배분 방향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과 위험자산 선호 회복 등을 반영하여 전통자산 확대		
	구분	자산배분(%)		'23년 운용 성과(억원, %)	
		'22년 실적	'23년 목표	'23년 실적	'23년 실적
	채권(a)	37.4	39.5	36.3	1,738 7.4
	주식(b)	25.6	27.5	31.3	3,707 23.3
	전통자산(a+b)	63.0	67.0	67.6	5,445 13.9
	대체투자(c)	37.0	33.0	32.4	1,555 7.2
	계(a+b+c)	100.0	100.0	100.0	7,000 11.5

▶ 시장상황별 적시 전술배분을 통해 운용성과 극대화 (주식 중심으로 전통자산 비중 확대)

① 전통자산(직접운용 확대, 간접운용 축소)	② 대체투자(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주식) 수익률 높은 직접운용 비중 확대 • (국내채권) 간접운용 펀드 전액 회수 후 직접운용 전환을 통해 수수료 절감 및 수익률 제고 <p>(국내주식) KOSPI 대비7.0%p 초과수익률 달성 (국내채권) 채권지수 대비0.8%p 초과수익률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실현) 국내부동산 매각, 254억원 차익 실현 • (신규투자) 선순위대출펀드(1,300억원), 해외 벤처펀드(500억원) 설정·집행 <p>대체투자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수익률(BM) 대비 0.76%p 초과수익률 달성</p>

3 윤리위험 진단·평가·통제 프로세스를 통해 부패연결고리 차단

윤리위험 진단 및 통제	① 위험 분석		② 위험 평가·구분	③ 위험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채널 접수내용, 내·외부 감사 및 징계현황 고려하여 분석 • 위험 유형화, 요인 및 원인분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11개)·고유위험(9개) 구분 - (공동) 공공기관 공동발생 항목 - (고유) 공동고유사업·조직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특성, 정부정책, 파급력 등 반영한 7대 핵심 윤리위험 선정 • 윤리경영위원회 심의·의결

7대 핵심 윤리위험 선정	구분	위험분류	선정 사유
	① 인사·채용	공동위험	• 설문항목 중 최근 3년 연속 취약분야 선정, 채용비위의 사회적 파급력
	⑦ 이해충돌	공동위험	• 이해충돌방지법 본격시행에 따른 정부정책 강화, 높은 대외관심도

중점관리	7대 핵심 윤리위험에 대한 위험별 중점관리 방안 마련·시행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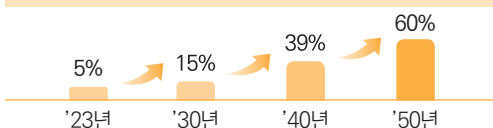
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최초, 2050 탄소중립(NET ZERO) 달성계획 수립

탄소중립 로드맵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온실가스 감축수단 선정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현황 조사, 감축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원 실태평가, 감축수단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목표, 연도별 시나리오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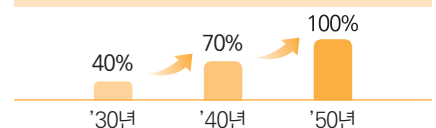
감축수단	Cut down 에너지 효율 향상	Renewable 신재생에너지 전환	Green infra 능동적 탄소중립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업무·작업용차 131대 • (그린리모델링)화석연료 전기화, 고성능 창호로 교체 등 • (에너지 절약)자체 에너지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태양광 3MW설치 • (지열)히트펌프 2.8MW 설치 • (풍력)소형풍력 1.5MW 설치 • (ESS)백업저장장치 0.6MW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RE100 가입 •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량 관리 강화, 성과관리 연계 • 감축 부족분 REC 구매

감축비중	34%	60%	6%
------	-----	-----	----

신재생에너지 전환율 60% 달성



탄소 감축률 100%(NET ZERO) 달성



핵심성과

끈끈한 신뢰속 노사가
함께 도입 추진

직무실무 운영
('23.3월)

노사합동간담회
(4.12.~4.27.)

익명 의견수렴
(5.8.~6.30.)

직원협의체 간담회
(5.9.)

초직원 설문조사
(5.12.~5.18.)

피드백 조사
(12.11.~12.18.)

핵심성과

-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국무총리 표창 수상

- 「공공기관-전통시장
ESG 상생활동 공모전」
우수상 중소벤처기업부 수상

5 구성원이 공감하는 초직원 G·E·P·S形 직무급제 전격 시행

• 간부직 보수체계는 직무중심 개편·고도화, 비간부직은 별도 직원 참여형 직무급제 마련

추진방향

	기존	개선	달성목표
간부직	형식적 운영	직무 프로세스 도입, 직무급 대폭 확대	직무급 고도화
비간부직	미도입	간부직 프로세스 참조, 직원 참여형 제도 마련	수용도 높은 직무급제 시행

•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과 경영전략 등을 반영하여 515개 직무 도출

수직적 분류	수평적 분류	직무수
간부직 직무(부서장·지부장·부장)	L Level	• 혁신기획실장, 인사윤리실장, ... 65개
중간간부 직무(팀장·차장)	M Level	• 기획차장, 교육차장, 총무차장, ... 124개
실무직원 직무(과장·대리·주임)	J Level	• 기획, 재직관리, 급여심사, ... 326개

• 간부직과 비간부직의 특성을 감안한 개선된 프로세스로 직무평가 시행·완료

간부직 평가	비간부직 평가
• L Level 직무 65개 → 이의신청 6건(대상의 9.2%)	• M·J Level 직무 450개 → 이의신청 14건(대상의 3.1%)

간부직 도입결과

- 직무등급 5등급 → 6등급 세분화 및 직무급 비중 확대
(연지급액/단위: 천원)

기준급 대비 직무급 비중

최고-최저 등급 차등액

연도	기준급 대비 직무급 비중	최고-최저 등급 차등액
'22년	7.0%	2,760
'23년	17.9% (2.6배)	15,000 (5.4배)

비간부직 도입결과

- 직무등급 8등급 세분화, 직무가치 차이 반영 강화
(연지급액/단위: 천원)

기준급 대비 직무급 비중

최고-최저 등급 차등액

연도	기준급 대비 직무급 비중	최고-최저 등급 차등액
'22년	0%	0
'23년	6.8%	1,680천원

6 보유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 「제주形 중장년 세대 돌봄」 프로젝트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세대돌봄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공무원의 공직 경험을 활용하여 중장년 세대와 아동이 서로 돌봄의 주체가 되어 중장년세대의 경력단절과 아동 돌봄 공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모델 		
협업체계	추진내용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주관 • 제 주 도 사업제안 • 공 단 계획·수행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돌봄사업 안내·참여자 모집(20명) • 자기돌봄과 역량강화 프로그램(35회) • 세대돌봄 현장 실습·파견(3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공무원 활용 세대 돌봄선순환 모델 구축 - 일자리 16명, 수혜아동 3,243명

▶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지원 등을 통한 경영안정 및 상생 실현

공단業과 연계한 판로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특판	사옥內 장애인 카페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휴물 「가치소비관, 진입장벽 해소 및 홍보지원 - 제휴복지물 경험 없는 지역기업 (3개사) 등 가치소비관 입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지역주민·이전기관 대상 초대장 배포 • (참여) 사회적 경제·자활 기업 - '22년 13개사 → '23년 18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환경) 인근 동종 사업장 다, 인지도 낮음('23. 9월 오픈) • (경영지원) SNS 홍보, 텀블러캠페인 등 ESG사업 연계 홍보
'22년 23개사 → '23년 98개사 운영	참여기업 매출액 275% 향상	4명 고용창출, 손익분기점 조기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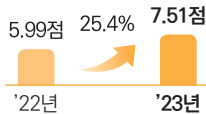
7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인력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대

▶ (공모직위 드래프트) 핵심보직 공개경쟁 선발을 통한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추진 절차	공모직위 지정			공모직위 드래프트		
	부서신청	심의	확정	모집신청	순위 지명	매칭/선발
	2~3개 직위	인사위원회	20개 내외	희망 직원	보직 부서장	인사윤리실
추진 실적	공모직위 : 21개 직위 지정			드래프트 : 10명 직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직위 운영 직원 설명회 개최 공모직위 신청 및 심의 - 21개 직위 선정·지정(인사위원회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래프트 대상 공모직위 공개 - (2급) 혁신부장 등 3개 / (3급) 인사차장 등 7개 드래프트 신청(경쟁률 3:1) 및 매칭·선발 		

핵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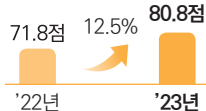
- 내부청렴도 인사업무
공정성 부문 큰 폭 상승
(순항목 중 최고)



▶ (인사·교육)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임직원 전문성 강화

직무역량 기반 인사관리 고도화	전문인재 체계적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중심 인사평가) 유능 인재 발굴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 승진심사배수 ↑, 평가비중 합리화 (전문직위 운영 강화) 중간심사 및 역량강화 교육지원으로 우수 직원 선발배치(6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IDP) 사고·업무·관계 등 5단계 평가 기반 개인별 교육 큐레이팅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달성 지원 (디지털 프론티어) 단계별 실습 위주 역량 향상 프로그램 시행 → 데이터 자격증 13개 취득

혁신 진단지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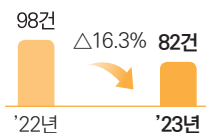


8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기반한 사업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보호

근로자 참여기반 위험성평가			골프장 안전사고 집중관리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 중심 평가 위험 제거 중심의 '근본적 대책' 마련 		추진 배경	골프장 타구사고 등 이용객 및 캐디 사고 지속발생 ('22년 83건, 공단 안전사고의 98건의 84.7%)
교육강화	위험성평가	위험관리	관리적 대책	공학적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 위험성 평가지침 개정 (신규) 감독자 → 전근로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평가과과정 근로자 참여 (신규) 전년 발굴 위험요소 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치해야 위험요인 11,663건 발굴 → 관리대상위험 1,874건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객 안전캠페인 실시 - 5개 사업장 38,606명 캐디 안전의식제고 교육 - 9회 방문교육(67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드 낙상방지 안전바 특수 제작·설치(406대) 카드도로 위험구간 AI 음성 안내 송출시스템 도입

핵심성과

- 시설사업장 안전사고
16.3% 감소



9 기금관리형 최초 노사협력기금 조성으로 예산 투입 없는 복리후생 혁신사례 제시

추진배경	직원 복지 증진 등 근로여건 개선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재원확보	노동조합(직원)과 임원 및 1·2급 간부직이 매년 자발적으로 출자하여 기금 조성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노동조합(3급이하 직원) 25백만원(노조 운영예산 절감) </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임원 및 1·2급 간부직 7백만원(매월 1~5만원 납부) </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연간 출자금액 약 32백만원 </div> </div>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 퇴직자 기념품, 초교 입학 축하금, 임원 위로금 등 노사공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 - 꽃자왈 매입기금 후원 등 제주형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참여 → '23년도 예산 절감효과 : 27백만원('23년도 집행금액) 		

핵심성과

복리후생만족도 상승



2023 Best Practice

가입자관리사업 우수성과

1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7개 연금개혁안 정립, 재정안정 방향 제시

핵심성과

- 국회 연금개혁특위 및 정부(보건복지부) 개혁 논의 참여 및 직역연금 개혁방향 제시
-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본격 개혁추진 시 합리적인 직역연금 개혁논의 기반 구축

추진배경

공적연금 전반 구조개혁 필요성 제기(연금개혁특위, 2.8.) 반영,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개혁안 검토

개혁대안
도출

- 그간 논의된 대안들의 주요 특성 종합 분석 → 4개 구조개혁안, 3개 모수개혁안 마련

구분	주요내용	소득대체율(증감)
현행	국민연금보다 후한 공무원연금 + 퇴직수당(민간 퇴직금의 39%)	57.10%
구조안	1안 개정 전후 제도 분리(신규 공무원 3안, 기존 공무원 5안 적용)	신규45.6% / 기존53.1%
	2안 국민연금 완전 통합(신규·기존 공무원 국민연금 가입, 퇴직금 지급)	45.6% (△11.5)
	3안 : : :	: : :
모수안	6안 현 퇴직수당 유지하되 민간 퇴직금 대비 부족분을 5안 연금에 반영	55.6% (△ 1.5)
	7안 민간수준으로 퇴직수당 인상하되, 인상분만큼 연금지급률 차감	54.6% (△ 2.5)

* (구조개혁) 급여·재정방식 등 종전제도를 변경 / (모수개혁) 종전률 유지, 지급률 등 변수 조정

시사점 도출

- **【구조개혁안】** 국민연금 완전통합(2안)은 수입 단절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 급증으로 실현가능성 부족
- **【모수개혁안】** 연금인하, 민·관 형평성 제고 가능한 '7안'을 실현가능성 높은 대안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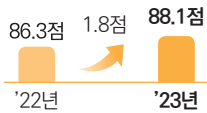
결과활용

- 인사처 합동 워크숍 통해 대안별 실현가능성 등 검증 → 7안 국회(연금특위) 등 제시, 최종보고서 채택
-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정책보고서에 개혁 내용 반영 → 공론화 기반 마련

2 고객 편의증진과 권리를 보호하는 고객중심 연금서비스 제공

핵심성과

- 고객 편의증진 노력으로 고객만족도(GCSI) 개선



1 재직기간 합산 예상퇴직금 유불리 조회시스템 신설

- (배경) 재직기간 합산 시 퇴직급여 유불리 문의 증가
- (내용) 예상퇴직금 조회서비스 내 가상합산 기능 신설 및 이직 잦은 공무원 대상 맞춤형 상담 실시

종전

- 업무담당자에게 유선문의 및 민원응대

개선

- 고객 연금복지포털 내 조회
- 업무담당자 시스템에서 간편 계산 조회
- 상담 이직 잦은 공무원 상담

합산관련 민원 경감('22년 15,228건 → '23년 13,942건)

2 비대면 접점 연금서비스 신규 발굴 및 개선

- (배경) 인터넷·모바일 기반 고객수요 증가
- (내용) 유족급여, 퇴직급여 종류 변경 인터넷청구 구축

종전

- 방문 우편·팩스 청구
- 유족서류 고객발급
- 심사상태 확인불가

개선

- 연금복지포털 내 인터넷 청구
- 공공데이터 활용 서류 간소화
- 접수·완료까지 실시간 조회

• 자동응답·질의유도 등 채팅·챗봇 민원상담서비스 고도화
비대면 민원상담 증가('22년 81,954건 → '23년 178,923건)

3 고객이 놓치기 쉬운 권리 적극 찾아주기

- 기여금 일시납부 가능대상(휴직 납부유예자 등) 맞춤형 안내

개인 알림톡

인상전·후 금액 비교, 납부내역 등 개별안내

홍보매체

홈페이지, 유튜브, 등 일시납제도 홍보 확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운영 종료 후 휴업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추가(8개월)인정 법원 판결
- 퇴직급여 청구(1명) → 미청구자 추가 32명 인지 및 적극행정위원회 거쳐 별도 청구행위 없이 급여 재지급

4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업무 효율화

- (배경) 병적자료 일치 여부 수기심사로 업무 비효율 발생
- (내용) 병무청-공단 간 병적자료 연계 및 일치 시 자동심사

신청자 등록 복무사항

자동심사대상자 조회

↓ 일치

병무청 병적자료

자동결재

병역법상 복무월 수

자동심사처리율 50% 달성(2,144건/4,270건)

2023 Best Prac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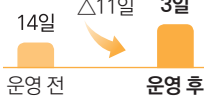
급여관리사업 우수성과

1 2년여 노력의 결실, 블록체인 생체인증기술로 65만 연금수급권 확인 일사천리

핵심성과

신상조사 처리일수 단축

- 연중수시 신원확인 가능
신상조사 처리일수
11일 단축

그간의
추진노력

- 공단 지능형 연금복지시스템 구축안으로 디지털 혁신기술 활용 인프라 완비
- 모바일 비대면 확인 고객여건 수렴 및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지원사업' 최종사업자 선정

'22년 기반조성

- 지능형 연금복지 시스템 구축

'23년~'24년 전환기

- 생체인증시스템 구축, 실시간 신원 확인

'25년~ 확장기

- 시 기반 급여 자동지급 대상 확대

시스템
공신력
확보

- 촬영한 안면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 대조(외교부·경찰청 협업)
※ N연금 운영사례에서 드러난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문제점을 개선 반영하여 차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정기회의 개최(52회)로 현안문제 해소

無서류
無방문
無기다림
서비스 운영

신분증 OCR

신분증(여권) 진위확인
연계 사진 정보 추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안면정보

안면촬영
안면촬영과 신분증 사진
특징점 추출

음성정보

음성인식
제시된 문장 읽기
음성 특징정보 추출

신원증명 발급

DID Wallet
연금수급자
신원증명서 발급
DID 서버

2 연금운영의 Data·Network·AI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업무 프로세스 개선

핵심성과

- 시스템 연계·협업으로
부담금 데이터 누락
제로 달성

데이터 누락건수



- 연금정보 고객 맞춤
제공으로 연금 수급권
상실 예방

1 정보보수예산 시스템 연계로 부담금 산정 정확성 제고

- (연계) 국가직·지방직·교육직 보수예산 연계
- (내용) 교육직 보수예산시스템과 공단시스템 간 연계로 100% 자동 송·수신체계 구축 및 데이터 심사 자동화

종전

- 보수예산 데이터
개별요청
- 자료누락, 지연
- 제외항목 추가심사

개선

- 일괄 자동 송·수신
- 특정단어 필터링 기능 개선
- 데이터 신뢰·정확성 개선
- 보수예산 비대상 항목 정비

데이터 송수신 횟수 급감('22년 1천회 → '23년 18회)

2 비대면 접점 연금서비스 신규 발굴 및 개선

- (배경) 단기 재직 퇴직자의 신속한 급여지급 요청 증가
- (신속심사) 자동 급여심사 시스템 구축

인사시스템
연계

단기 재·퇴직자
정보 실시간
수신

자동심사
프로세스 구축

- 대상공무원
자동 분류
- 실시간 급여
자동심사

신속 지급

즉시 지급결정
(4,210명, 전체
건중 7.6%)

급여 심사일수 단축('22년 5.3일 → '23년 1일)

3 유족연금수급권 비대면신청 확대

- (배경) 수급자 사망시 82%가 안심상속서비스* 이용
* 사망자 재산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공무원연금시스템 연계)
- (내용) 상속인(안심상속서비스 등록 연락처 활용)에게 제도 및 연금승계 인터넷 신청방법 문자로 선제 안내

종전

- 연금수급자 사망
여부만 확인, 연금중지
- 유족 공단 방문 등 대면
수기작성 신청

개선

- 안심상속 정보 연계,
승계제도 문자안내
- 유족연금승계 비대면
신청 활성화

연금수급권 변경 적기처리를 상승('22년 74.1% → '23년 82.8%)

4 모바일 활용 연금소득 연말정산 간편신고 최초 도입

- (신고) 신고대상자 증가로 모바일 간편 신고 최초도입
- (결과) 네이버 전자고지 수신 7.4만명 동의 확보를 통한 모바일 안내로 우편 등 비용 절감
- (연계) 인적 공제에 필요한 필수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종전

- 인터넷 및 우편신고
- 우편으로 결과 안내

개선

- 인터넷·우편·모바일 병행
- (1차)모바일 네이버 전자고지
→ (2차) 미수신자 우편안내

디지털 이용자 증가('22년 32만명 → '23년 36만명)

2023 Best Practice

재해보상사업 우수성과

1 안전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23~'27년) 예방·재활 발전계획 최초 수립

핵심성과

- 재해보상 예방·재활 추진근거 마련에 따른 「예방-보상-재활」 선순환 서비스 운영기틀 확립

로드맵	1단계 도입기('18~'22년)	2단계 확산기('23~'24년)	3단계 정착기('25년~)
예방사업	• 조직구성 및 사업 시행	• 예방사업 실행력 강화	• 공직 예방 전문기관 위상 확보
재활사업	• 사업초기 선연적 규정	• 재활·직무복귀 추진기반 마련	• 재활서비스 확대·발전
추진전략	재해예방 추진 인프라 확충	맞춤형 재해예방활동 강화	재활·직무복귀 서비스 혁신
추진과제	• 데이터수집, 제도보완 등 3개	• 예방서비스 실효성제고 등 3개	• 요양케어서비스 확대 등 3개
실행과제	•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등 10개	• 고위험 직종 집중관리 등 10개	• 전문재활 연계 확대 등 12개
실행과제	• 예방서비스 만족도 등	• 마음건강 자가진단 참여인원 등	• 요양케어서비스 수혜인원 등

2 빠르고 간편한 새로운 보상서비스 시행, 공무원 對국민 서비스 전념 지원

핵심성과

명백한 공무상 부상
평균 처리일 단축



추진배경

재해보상급여 신청건수 대폭 증가 대응 및 주요 질병에 대한 고객 입증 부담 해소
※ 최근 3년간 재해보상급여 청구건수: '21년 6,535건 → '23년 8,689건(32.9% ↑)

1 [신속승인] 명백한 공무상 부상 직접 심의제	2 [입증편의] 공무상질환 추정제										
<p>개요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의한 공무상 사고는 인사처 심의 없이 공단이 직접 심사 결정</p> <p>요건</p> <table border="1"> <tr> <td>공무수행</td><td>법률쟁점</td></tr> <tr> <td>공무와의 인과관계 명확</td><td>다툼여지 없음</td></tr> </table> <p>• 경미한 상병, 급성 병변 등 16종 확정 → 1,669건 신속심사</p>	공무수행	법률쟁점	공무와의 인과관계 명확	다툼여지 없음	<p>개요 교대근무, 장시간근로, 유해환경에 따른 질병발생시 공무상 재해 추정</p> <p>요건</p> <table border="1"> <tr> <td>뇌·심혈관</td><td>12주간 평균 52시간 교대근무</td></tr> <tr> <td>직업성암</td><td>화재진압, 정비 등 직무·기간별 설정</td></tr> <tr> <td>근골격계</td><td>부위, 직종, 직무기간별 설정</td></tr> </table> <p>• 입증서류 감소(13종 → 6종), 9건 공상추정 적용</p>	뇌·심혈관	12주간 평균 52시간 교대근무	직업성암	화재진압, 정비 등 직무·기간별 설정	근골격계	부위, 직종, 직무기간별 설정
공무수행	법률쟁점										
공무와의 인과관계 명확	다툼여지 없음										
뇌·심혈관	12주간 평균 52시간 교대근무										
직업성암	화재진압, 정비 등 직무·기간별 설정										
근골격계	부위, 직종, 직무기간별 설정										

3 공상공무원 중증도지수* 및 위험성평가모델 개발, 예측형 서비스 운영 기반 마련

* '상병코드·재해유형·연령·부위'에 기반, 환자상태 경중(輕重)을 나타내는 지수로 재해대상 선정·지원에 활용

핵심성과

- 공상공무원 치료상태의 직접 정보없이 재활서비스 필요자 조기 선정체계 구축
- 사무환경 모델 최초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배경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재해 발생 시 적기 재활치료 제공을 위한 체계적 서비스 기반 구축

1 공상공무원 중증도지수 개발						2 위험성 평가 개발·운영	
분석 개발	• 4개 기준값(상병코드, 부위 등)과 장애등급 분석 • 평균근로능력회복률 선정 및 중증도지수 확정						
활용	• 「명백한 부상 공단 직접승인건」 대상 공상공무원 중증도지수 우선 적용 (대상별 서비스 안내내용 : ● 적극필요, ○ 권고)					사무 위험	(사무위험) 공직 사무환경 위험성 평가모델 자체개발
	구분	전문 재활	작업능력 강화	재활운동 지원	심리상담 지원		• 공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모델 개발 - 상병경위분석 → 초안개발 → 이해관계자 설문·자문 → 델파이분석 • 현장적용, 중앙부처 시범운영 등을 통해 완성도 제고 • 책자 기관배포, E-Book 제작 및 재해예방포털 게시
	극도 (1~3급)	●	×	○	○	시설 위험	(시설위험)고위험 직종 위험성평가 컨설팅 확대
	고도 (4~7급)	●	○	●	○		• 재해발발직종 수요조사로 선정(소방 9개, 경찰 1개)
	중등도 (8~9급)	○	●	●	○		• 현장조사(정밀진단)로 유해·위험요인 127건 발굴 및 64건 사전제거(안전난간 설치, MSDS 경고부착 등)
	경도 (10~12급)	×	○	○	○		•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2023 Best Practice

복지사업 우수성과

1 복지재원 기금분리를 통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자율성 확보

핵심성과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미래방향 설정, 복지재원 신설 등 지속가능 기반 마련

추진배경

연금기금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필요

복지사업 자체사업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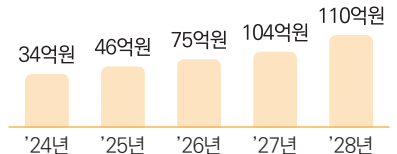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기금사업에서 분리하여 공단 자체사업으로 전환

구분	기금사업	위탁사업	자체사업
사업	복지시설, 융자사업 등	대여학자금, 맞춤형복지 등	가정친화, 공직활성화
성격	수익성·복지성 추구	국가·지자체 예산 사업 수행	순수 복지성 추구

복지재원 확보

- 제휴복지운영수익 활용 (기획재정부 승인)
- 공무원이 제휴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
- 연금급여 지급재원에 비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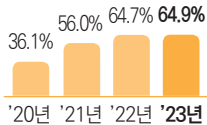
제휴 수익 목표



2 부동산경기 침체 극복, 다각적 노력으로 개포9단지 1,829세대 입주 완료

핵심성과

- 미래세대 주거지원 역대최고실적 달성



문제인식

- 금리인상 및 인근주택 과잉공급

대응방향

- 입주를 종합 제고방안 마련

경영진 노력

- 전사노의, 제고방안 이사회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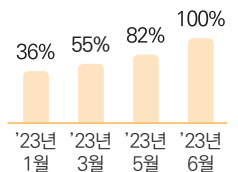
수급여건 맞춤형 대응

- 시장 동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거쳐 종합대책 조기 마련
- 본부장 협의회 주도 입주촉진 방안 전면적 도입 결정
 - 임대보증금 인하, 입주기한 연장, 신청자격 완화 등(총 10차)

홍보노력

- 서울시 등 27개 대형 연금취급기관(40만명) 방문 홍보
- 입주가능지역 재직자 대상 문서 시행, 카카오톡 발송 등

개포9단지 입주를 추이



3 퇴직공무원 전문성과 일자리를 잇는 적재적소 매칭채널 “퇴직인력뱅크” 구축

핵심성과

- 퇴직공무원·민간 수요기관 간 매칭 플랫폼 구축으로 공직경험 활용 및 전직지원 강화 기반 마련

추진배경

공직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발전 기여 및 퇴직공무원 경제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풀 DB 구축

- 일 정보, 매칭·인력풀 검색 DB 확보

기본 정보

인적사항, 학력, 관심분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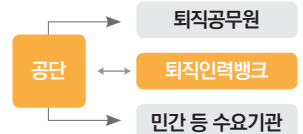
일자리 정보

희망직무, 고용 형태, 급여 등

전문상담·정보 제공

- 공단 중장년일자리컨설턴트(11명) 활용 전문상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 주도적 협업노력으로 워크넷, 50+재단 등 전문기관 정보 연계

일자리 매칭



4 적극행정으로 일궈낸 특별재난·전세사기 피해공무원 주거지원 안정화 대책

핵심성과

재난지역 특별공급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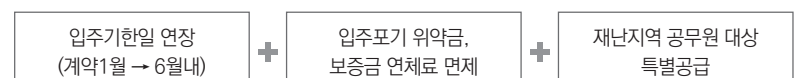
추진배경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제정(6.1.),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7.19. 13곳) 선포 등 정부정책 적극 이행

추진방향

- 피해공무원 지원규정 미비(규정개정 3월 소요)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로 처리기간 단축, 적기 시행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반영 → 세부 운영기준 마련 및 시행

지원제도 마련



1. 공무원연금 및 재해보상제도



1-1 제도 개요

1-2 발전과정

1-3 재정전망

1-4 운영구조

1-1

제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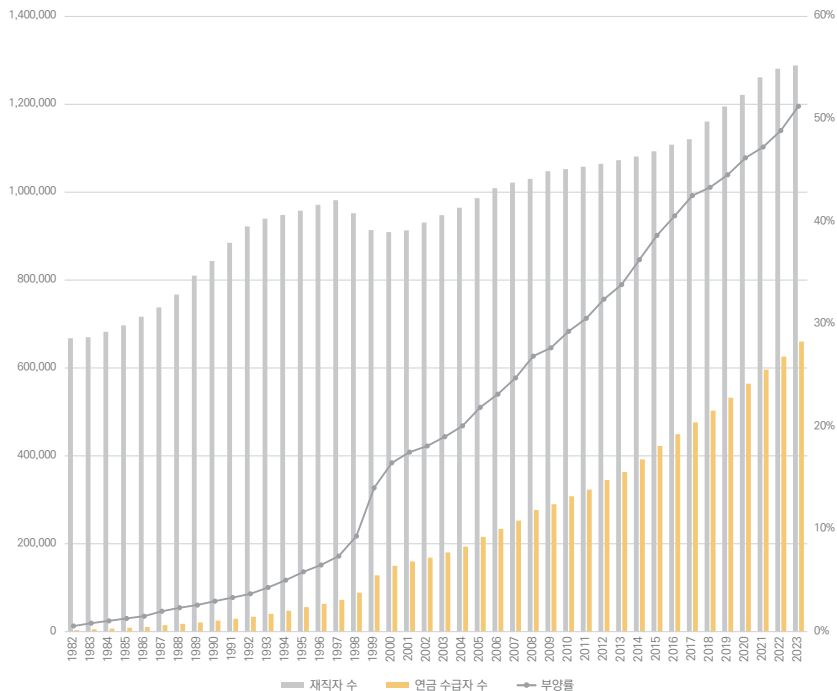
▶ 목적과 적용대상

한국의 공무원연금제도(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는 일반 국민연금제도(National Pension System)에 앞서 도입된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 사망, 재직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할 때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일반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직업공무원제(career-based civil service)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공무원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한 연금제도이다. 적용대상을 보면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육 공무원, 경찰·소방 공무원, 판사·검찰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이 하나의 독립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말 현재 재직공무원 1,288,301명과 연금수급자 660,072명(연금지급개시연령 미도래자 포함)을 합하여 총 1,948,373명이 공무원연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향후 연금수급자수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급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미래의 연금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직 공무원수와 연금수급자수 추이



▶ 급여의 종류

〈연금급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등이 있다. 이 중 노후소득 보장 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퇴직급여의 경우, 제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이 지급되고, 10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선택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전액 일시금 수령) 또는 퇴직연금공제 일시금(부분 일시금 수령)이 지급된다. 한편, 10년 미만 근무한 단기재직 공무원이 이직 후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공적연금간 연계를 신청하게 되면 퇴직일시금 대신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는 기준소득, 지급률,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1.7%를 적용받고, 65세에 연금이 개시된다. (기존 재직자의 경우, 각 연금 개혁시점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안분하여 당시 법을 적용받아 계산한다)

〈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거나 장해상태로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급여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재해보상급여는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가 있다. 공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을 할 때에는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한다. 요양급여를 받는 공무원에게 재활급여로서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요양종료 후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로 퇴직했을 때는 장해연금이나 장해일시금을, 사망했을 때는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일시금 형태의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재해보상급여 중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해서는 특별보상으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2016년부터 공무와 무관한 사유로 인한 질병·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했을 때, 또는 퇴직 후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부조적 성격의 급여이다. 재난부조금은 공무원이 수재·화재 기타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 지급한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부모 또는 자녀 등이 사망한 때에 지급한다.

* 비공무상 장해급여 : 장해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하여 지급됨

1-2 발전과정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약 30여 차례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특징을 크게 살펴 보면 1990년대 초까지는 연금 수혜를 확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반면,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공무원과 사용자인 정부의 비용부담률 인상 및 연금급여 등 수혜를 축소하는 방식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 개혁을 통하여 연금 수지적자를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비중을 강화했으며, 2009년에는 비용부담률 인상,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 등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이 있었다. 또한, 2015년에는 재정안정화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의 개혁을 통해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된다.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공무원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 사업의 주요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태동기 (1960~1962)

-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직, 경찰·소방직, 법원공무원, 군인 등을 포괄하여 적용하였음. 다만 선거에 의한 공무원은 적용에서 제외되었음.
- 급여의 종류는 퇴직연금, 유족일시금, 장해연금 등 5종의 장기급여를 실시
- 비용은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보수월액의 2.3%를 부담

▶ 확대기 (1963~1966)

- 1962년 8월 공무원연금법을 전문 개정하고 그간 산발적으로 시행하던 공무원 복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의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써 체제를 확립함
- 급여의 종류에 있어 요양비, 분만비, 장제비 등 5종의 단기급여를 신설하였고, 유족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 군인연금법의 제정으로 군인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1963년)

▶ 발전기 (1967~1981)

- 1966년 4월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의 개정을 계기로 연금기금 운용 방법이 크게 달라짐
 - 즉, 당해 연도의 잉여금을 정부 예산상의 세입세출과는 완전 분리하여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기금을 설치
 - 또한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예탁하던 기금을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매입, 공무원 또는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금융기관에의 예입, 재정자금에의 예탁 등의 방법으로 자체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연금 급여 면에서도 퇴직연금지급률이 40~50%에서 50~70%로 인상 조정되었으며, 퇴직일시금도 종전보다 1.5배 정도 인상하는 조치가 이루어짐

▶ 전환기 (1982~1995)

- 20년 동안 정부에서 운영하던 공무원연금 업무를 별도의 독립법인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변경
 - 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확대실시 등을 위하여 1982년 2월 1일 사업경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부여된 공공기관 설립
- 이를 통해 연금기금을 통한 각종 후생복지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연금제도면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수혜확대를 위해 급여 종류의 다양화 및 급여액 수준의 인상조치가 이루어짐

▶ 제도 개혁기 (1996년~현재)

- 1990년대에 들어와서 연금수급자의 증가와 함께 연금재정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이에 따라 그동안 유지하던 공무원 복지의 확대정책을 중단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게 됨. 이러한 연금개혁은 현재까지 크게 4차에 걸쳐 단행되었음

〈제1차 연금개혁: 1995년〉

- 20여 년간 고정되었던 공무원 개인과 정부의 비용부담률이 인상되었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급여이나 연금 기금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던 퇴직수당,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변경
- 급여면에 있어서도 법 개정 이후 임용자에 대한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신설, 공공기관 중 연금지급 정지대상 기관의 확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제2차 연금개혁: 2000년〉

- 공무원 개인과 정부의 비용부담률을 올리고 향후 급여의 부족분은 매년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수입구조를 개선
- 급여면에서도 연금지급개시연령제의 확대, 연금액 인상방법의 변경(공무원보수인상률→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에 연동), 연금지급정지제도의 확대 등 시행
- 이러한 개혁 조치 중에서 연금액 인상방법 변경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반발로 2003년에는 이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가 단행
 - 연금액 조정은 소비자물가지수로 하되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2%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이상 발생 시 이에 대한 정책적 조정 시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제3차 연금개혁: 2006~2009년〉

- 2006년 정부에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이 위원회에는 각계의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1기 및 2기 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설치 되어 장기간 논의를 진행하였음. 이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혁안이 200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음
- 개혁내용을 보면, 먼저 연금산정소득을 기본급과 일부수당만을 포함한 ‘보수월액(총소득의 65%)’에서 총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
- 비용부담률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는 한편, 연금액 산정을 최종보수 3년 평균에서 생애평균소득으로 전환하였음
-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법개정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65세로 상향조정
- 연금액 조정방식은 정책조정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 연동으로 전환
- 유족연금지급률을 법 개정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70%에서 60%로 인하
- 기타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심사제를 강화하였으며,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하여 연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제4차 연금개혁: 2014~2015년〉

-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의 불안요인은 지속되었고, 특히 일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자 다시 개혁을 단행하였음. 특히, 2014년부터 논의되어 2015년에 완료한 이번 개혁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오던 것과 달리,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이 되었으며, 다양한 이익단체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주요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 4차 연금개혁 주요 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기여율(공무원) 및 부담률(정부)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14% (공무원 7% + 정부 7%)	기준소득월액의 18% (단계적 인상) * '16년16% → '17년16.5% → '18년17% → '19년17.5%→ '20년18%
연금지급률 인하		재직기간 1년당 1.9%	재직기간 1년당 1.7% (단계적 인하) * '16년1.878% → '20년1.79% → '25년1.74% → '30년1.72% → '35년1.7%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없음	지급률 1.7% 중 1%에 재분배 요소 도입
기준소득월액 상한의 하향 조정		1.8배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1.6배로 하향 조정
연금 수급요건 조정		20년	10년
재직기간 상한 연장		33년	36년 (재직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09년 이전 임용자 60세 '10년 이후 임용자 65세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장 * '22년 61세 → '24년 62세 → '27년 63세 → '30년 64세 → '33년 65세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조정		'09년 이전 임용자 70% '10년 이후 임용자 60%	임용시기와 무관하게 60% 적용 * 개정 이후 유족연금 사유발생자부터
연금액 한시 동결		물가인상을 연동 조정	5년간 동결 ('16 ~ '20년)
연금지급 정지제도 강화	연금지급 정지제도 강화	공무원으로 재임용시	선거직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고소득자도 전액 정지 포함
	일부 정지	정지 기준 :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14년 338만원)	정지 기준 : 평균연금월액 ('14년 224만원)
		심사 대상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심사 대상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분할연금제 도입		없 음	혼인기간 5년 이상자 이혼시 해당기간 1/2 분할지급 (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결과 우선적용)
비공무상 장애연금 도입		없 음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시 지급 (공무상 장애연금액의 1/2 수준)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 재해보상제도 분리 독립 체제 형성기 (2018년~현재)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와 목적 및 재원을 달리함에도 그간 공무원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면서, 독자적인 제도로 발전되지 못하였음
- 아울러 민간의 산업재해보상에 비해 낮은 보상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에 2018년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위험직무순직요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등
② 순직·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수준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최고(1.6배)·최저(0.5배) 보상기준 도입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재직기간별 차등 지급 폐지
③ 재해보상심사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심)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 (재심)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
④ 재해예방, 재할 및 직무복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할급여(재할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신설 재해예방사업, 재할 및 직무복귀지원 사업 근거 마련
⑤ 비정규직 등 순직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요건 및 특례 신설

1-3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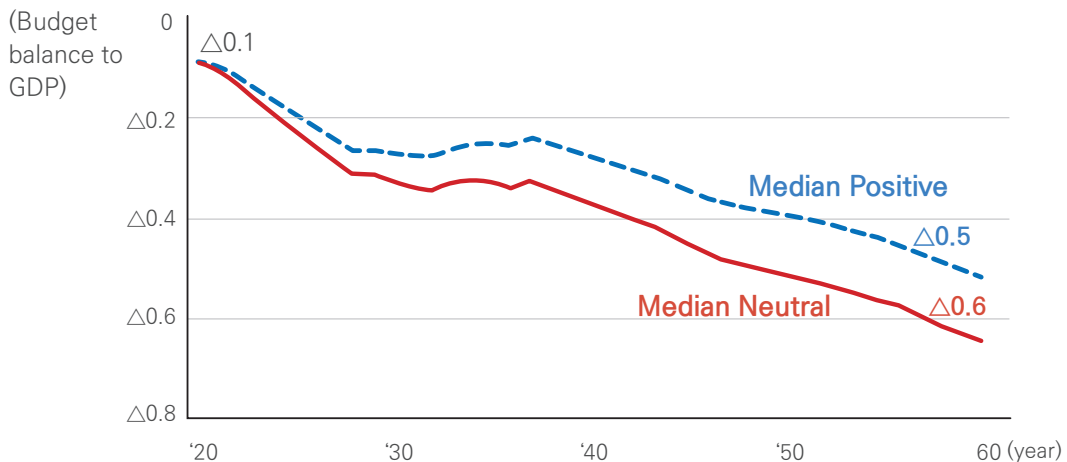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는 'Median Neutral' 기준으로 GDP 대비 2020년 0.1% 적자에서 2040년 -0.4%, 2060년 -0.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Median Positive' 기준을 적용하면 GDP 대비 2040년 -0.3%, 2060년 -0.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 Median Neutral : 인구추세 및 경제성장률이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
- Median Positive : 인구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둔화될 것으로 가정

GDP 대비 공무원연금의 재정	2020	2040	2060
Median Neutral	-0.1%	-0.4%	-0.6%
Median Positive	-0.1%	-0.3%	-0.5%

GDP 대비 재정전망 (%)



1-4 운영구조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은 인사혁신처장(제도 관장) - 공무원연금공단(업무 총괄) - 연금취급기관(소속기관 업무 집행)의 유기적 분담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제도 전반을 관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을 관리·감독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금의 운용과 급여의 지급, 기여금 및 부담금의 징수 등 연금관리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금취급기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원천징수, 급여사유 확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취급기관은 1,412개로 분류되어 있다.

2. 공무원 연금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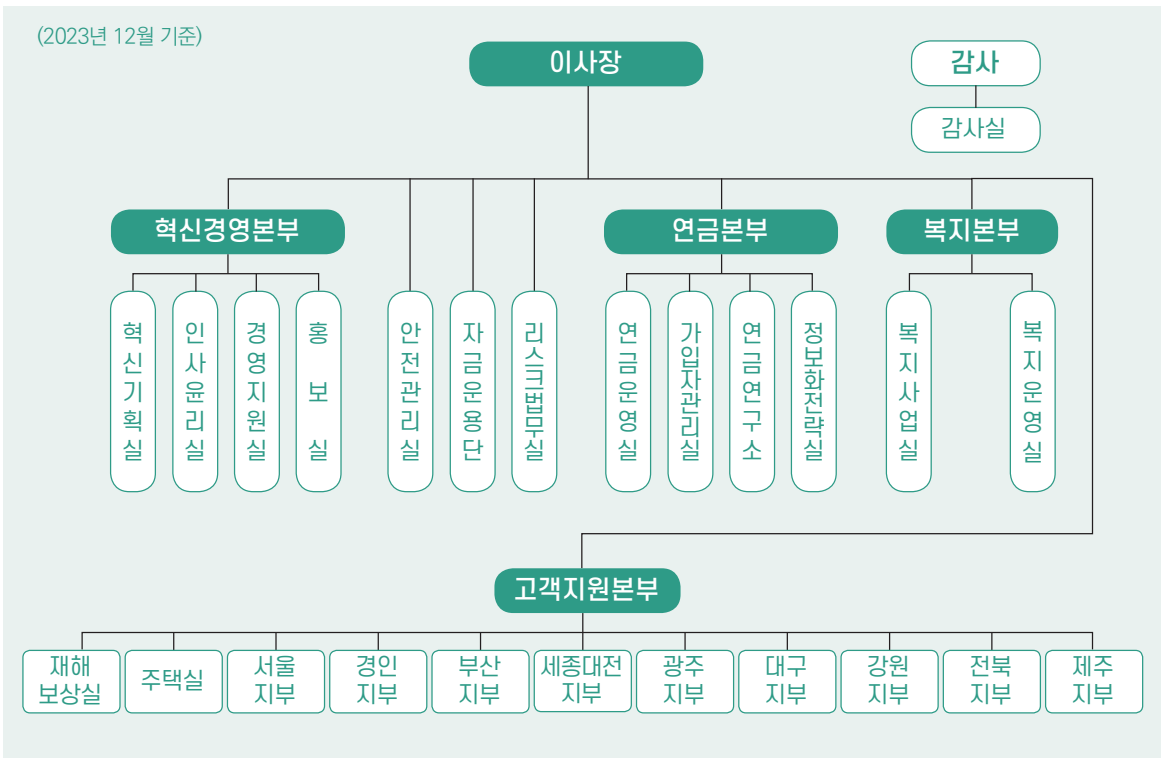
2-1 공단개요

2-2 사업구조

2-3 주요사업

2-1 공단개요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의해 1982년 2월 1일 설립된 공단은 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인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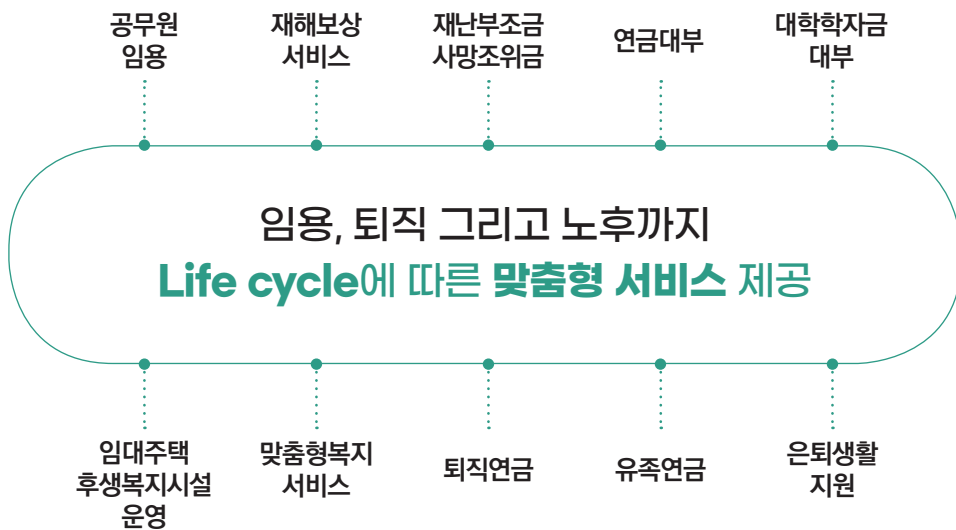
구 분	조 직	인원(명)
임 원	-	5
혁신경영본부	4실	100
안전관리실	1실	10
자금운용단	1단	27
리스크법무실	1실	14
연금본부	3실 1연구소	133
복지본부	2실	68
고객지원본부	2실 9지부	253
감사실	1실	11
합 계	4본부 14실 1단 1연구소 9지부	621

2-2 사업구조

공단은 아래 표와 같이 크게 연금사업, 재해보상사업, 기금운용사업, 기타 국가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금사업 및 재해보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퇴직급여, 재해보상급여, 그 밖의 급여의 지급
기금운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에의 예입,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대부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국가위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여학자금 대부 공무원 맞춤형복지 관리 은퇴생활 지원사업 등

공단의 사업은 공무원 개인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 임용부터 사망 시까지 시기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주요사업

연금

공무원과 정부로부터 급여비용을 징수하고 공무원이 퇴직, 사망 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를 생애주기별로 보면 공단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생애주기별 연금서비스 •



임용

- ① 신규임용
- ② 군경력산입
- ③ 합산 승인
- ④ 휴직·복직
- ⑤ 기여금 납부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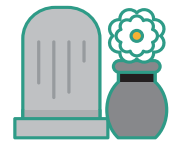
재직



퇴직

- ⑥ 급여 미청구 안내
- ⑦ 급여청구
- ⑧ 퇴직급여 지급 결정
- ⑨ 퇴직급여 지급
- ⑩ 연금지급도래
- ⑪ 퇴직연금 지급

연금수급



사망

- ⑫ 급여환수
- ⑬ 연금종결
- ⑭ 유족연금수급

▶ 재해보상

공무원이 재직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무상 재해 발생		
부상 · 질병	장해	사망 (사유발생일 '18.3.20.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상 요양 급여비용 공무상 요양을 한 때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해연금 장해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52%~9.75% 장해일시금 장해연금액의 5년분 일시지급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지급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지급 순직유족연금 본인 기준소득월액 × (38%+유족 1명당 5% 가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본인 기준소득월액 × (43%+유족 1명당 5% 가산) * 유족 1명당 5% 가산금액의 합은 20%를 초과할 수 없음 ※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대신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선택 가능(병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지급 간병급여 공무상 요양 종료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 		

이와 함께,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하거나 재해로 인한 주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조위금 또는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 금융자산운용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우량한 금융상품을 선별하여 투자·운용하는 사업이다.

기금의 운용방식은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자산운용위원회에서 금융자산배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시장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투자하고 투자자산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리스크관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후 외부 펀드평가기관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시 운용체계 등에 피드백하게 된다.

또한 선진화된 금융자산종합관리시스템(AMS)를 구축하여 자산배분·평가·위험관리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금융정보화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 융자사업

공무원이 대학등록금, 여유자금 지원이 필요할 때 국고 또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주는 사업이다.

〈학자금 대부〉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연금대부〉

공무원의 가계자금 대출로 생활안정 및 기금증식에 기여한다.

〈금융기관 알선대출〉

예상퇴직금의 1/2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있다.

▶ 주택사업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임대주택을 운영하여 무주택공무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무원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면서 기금수익 증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임대주택 운영〉

2023년 기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63개 단지에 19,553세대의 임대주택을 주변 전세금의 80% 이내로 무주택 공무원에게 임대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4년(기본 2년 + 계약갱신요구권 2년), 다자녀 가구 등 특례자의 경우 최대 6년이며, 계약기간 중 분양주택 등을 공급받은 경우 입주예정일의 월말까지 연장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건립 분양〉

무주택 공무원 및 무주택 연금수급자를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하고 있다. 2015년까지 수도권 등 33개 단지에 총 32,058세대를 공급하였다.

▶ 시설운영사업

제도가입자인 공무원과 그 가족의 즐겁고 건강한 삶을 위해 골프장, 호텔, 온천시설, 아쿠아피아, 놀이공원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천안상록리조트

면적 1,675천㎡(약 507.6천평)
건물 53천㎡(약 16.1천평)
대중골프장 27홀
호텔(222실) 및 놀이공원(아쿠아피아,
눈썰매장 등)



남원상록골프장

면적 1,144천㎡(약 346.7천평)
건물 6.0천㎡(약 1.8천평)
대중골프장 18홀



화성상록골프장

면적 1,587천㎡(약 480.9천평)
건물 23천㎡(약 7.0천평)
대중골프장 27홀



수안보상록호텔

면적 12천㎡(약 3.6천평)
건물 13천㎡(약 3.9천평)
호텔(101실)



김해상록골프장

면적 973천㎡(약 294.8천평)
건물 5.9천㎡(약 1.8천평)
대중골프장 18홀

▶ 맞춤형 복지제도

정부가 사전에 설계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이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가정친화 등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은 2006.11월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7.1월부터 맞춤형복지 업무를 정부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 2014년부터 공단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인사혁신처 등 135개 기관 약 95만 명이 사용 중에 있다.

▶ 은퇴생활 지원사업

공무원이 퇴직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퇴준비교육과 퇴직 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현직 공무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퇴직 이전〉

퇴직 이전에는 미래설계교육, 전직(轉職)설계교육 등 은퇴준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퇴직 8년 전, 5년 전, 3년 전, 1년 전 등으로 구분하여 퇴직 잔여시기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퇴직 이후〉

퇴직 이후에는 배움과 나눔 등 사회공헌 교육, 사회참여·문화·생활 강좌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퇴직공무원의 공직 경험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퇴직자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등의 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323개 봉사단, 약 1만 3천명의 단원이 교육, 안전, 행정, 환경, 생활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기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공무원 연금기금



3-1 기금개요

3-1-1 조성과 운용

3-1-2 운용체계

3-1-3 운용방법

3-2 운용성과

3-1 기금개요

3-1-1 조성과 운용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다. 이 연금기금은 연금회계로 부터의 적립금과 연금기금을 금융자산, 연금대출, 시설·주택사업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된다.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초기에는 연금보험료(개인기여금과 정부부담금) 수입이 급여지급액을 초과하여 연금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연금기금이 급여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1995년 처음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후 외환위기에 따른 정부 구조조정 등으로 1998년부터 2000년 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7년 6조 2,015억원에 달했던 기금규모가 2000년 말에는 1조 7,752억원으로 줄어 들게 되었다. 연금기금 감소로 인해 책임준비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연금수지 부족분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 주는 보전금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에는 기금운용수익금 만큼 기금규모가 증가하여 2023년 말 현재 15조 6,686억원으로 커졌다.

공무원연금기금의 부문별 자산규모는 2023년 말 현재 총 21조 3,933억원이며, 금융자산 7조 4,704억원 (34.9%), 대부사업 4조 2,049억원(19.7%), 주택 및 시설사업 7조 372억원(32.9%), 기타 부담금미수금 등 2조 6,808억원(12.5%)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연금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연금수지*			기금운용수익	연 말 기금규모
	수 입	지 출	차 액		
1981					5,491
1982	2,684	1,611	1,073	1,140	7,704
1984	3,673	1,841	1,832	1,461	14,672
1986	3,931	2,897	1,034	2,087	20,951
1988	5,418	4,596	822	2,641	27,893
1990	7,898	7,236	662	3,345	35,786
1992	12,767	12,095	672	3,810	44,918
1994	17,520	19,351	▲ 1,831	5,242	52,414
1996	24,760	24,321	439	4,871	56,805
1998	33,164	50,698	▲ 17,534	3,363	47,844
2000	34,374	43,832	▲ 9,458	920	17,752
2002	39,512	35,736	3,776	2,604	27,276
2004	49,264	49,264		2,543	33,218
2006	61,775	61,775		3,934	42,229
2008	78,293	78,293		▲ 1,182	46,861
2010	84,232	84,232		6,434	58,307
2011	89,391	89,391		1,798	60,105
2012	103,520	103,520		3,471	63,576
2013	107,624	107,624		20,094	83,670
2014	125,417	125,417		1,602	85,272
2015	136,769	136,769		2,270	87,542
2016	140,203	140,203		15,669	103,211
2017	148,820	148,820		6,295	109,506
2018	157,366	157,366		▲ 1,127	108,379
2019	169,102	169,102		12,050	120,429
2020	181,574	181,574		12,658	133,087
2021	189,047	189,047		18,665	151,752
2022	208,814	208,814		▲ 576	151,176
2023	230,472	230,472		5,510	156,686

* 연금수지에는 퇴직수당 포함, 재해보상 및 부조급여는 제외

공무원연금자산의 부문별 자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금융자산	연금대부	학자금대부	주택 및 시설	기 타	자산합계
액수	74,704	21,016	21,033	70,372	26,808	213,933

3-1-2 운용체계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은 공무원연금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간 금융자산 중심의 규정을 대출자산 및 실물자산까지 포함시켜, 전체자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09년 6월 공단 기금운용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는 기금운용목표, 투자정책 및 전략, 기금운용 성과평가 등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공단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금운용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히 금융자산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2010년 6월에 제정된 금융자산운용지침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자금운용단』에서는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융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산배분·평가·위험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금융자산 운용기구는 위원회(「자산운용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및 「실물자산운용위원회」)와 실질적인 운용 정책의 실행을 담당하는 내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리스크관리와 성과평가를 위해 자산 운용기구와 별도로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성과평가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 자산은 특히 2단계 자산배분절차를 거쳐 심의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외부전문가의 지식과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자금운용관련 조직도



공무원연금공단 내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내역

구 분		자산운용 위원회	대체투자 위원회	실물자산 운용위원회	성과평가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목적(기능)		전체자산 배분·운용	대체투자 심의	실물자산 배분·운용	성과평가 심의	금융실물자산 위험관리
구성원	위원수	10명	42명	11명	7명	8명
	위원장	혁신경영본부장	자금운용단장	복지본부장	외부위원	외부위원

3-1-3 운용방법

▶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원칙

공무원연금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목적은 기금증식을 통해 공무원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유동성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연금급여를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서이다.

기금은 기금운용규정 제4조에 따라, 안정성·수익성·유동성·복지성에 따라 자산을 운용한다. 즉, 자산의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정성, 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면서 최대 수익을 추구하는 수익성, 원활한 연금급여 지급 및 투자재원의 자체 조달을 위한 유동성,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복지성을 준수하여 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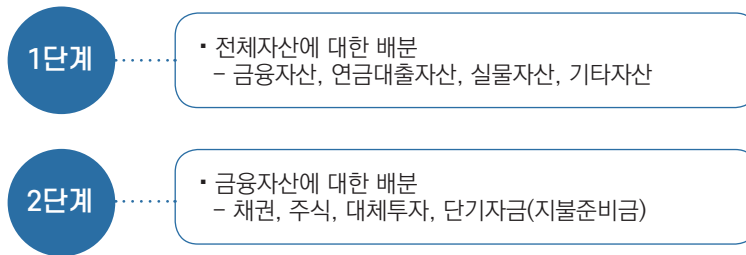
전략적 자산 배분과 관련하여 목표수익률과 위험 한도를 기초로 향후 5개년의 기간에 대한 자산배분안 및 기금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자산배분안에는 경제 상황 또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자산 군별 비중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기금운용의 자산군 분류

자산군 분류		
금융자산		실물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국내, 해외 / 직접, 위탁 / 국채, 특수채, 회사채, 금융채 등) - 주식 (국내, 해외 / 직접, 위탁 / 주식, 순수주식형, 사회책임투자형 펀드 등) - 대체투자 (부동산펀드, 사모펀드, SOC펀드 등) - 단기자금 (지불준비금 / 단기특정금전신탁, MMF, MMDA, 예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주택자산 - 공무원시설운영자산
		연금대출자산

▶ 자산배분 전략

전략적 자산 배분이란 중장기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목표 자산배분 비중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공단 자산 운용상 특이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에서 1단계로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전체자산 배분전략(금융자산, 융자 자산, 주택자산, 시설자산, 기타자산)을 수립하고, 2단계로서 금융자산의 배분전략(채권, 주식, 대체투자, 단기자금 등)을 수립하고 있다.



목표 수익률은 기금운용의 목표를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에 두고 적정 수준의 추가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물가상승률(CPI) + 추가수익률(a)}로 하고, 금융자산 허용위험 한도는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와 장기 안정적 목표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자산 운용성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하락 위험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최대한도로 설정한다.

전술적 자산 배분이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 자산 배분의 비중 허용범위 내에서 자산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금융자산의 경우, 자산운용위원회의 전략적 자산 배분비중 범위 내에서 금융자산투자위원회를 통해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위험관리 체계

각종 위험(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법규위험, 운영위험 등)을 사전·사후적으로 인식·측정·통제하여 자산 운용에 따른 위험과 자금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자산운용의 위험종류

- 시장위험 :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보유 유가증권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
- 신용위험 :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 원리금 등을 애초 약정한 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
- 유동성위험 :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법규위험 : 법 해석 또는 계약서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기금이 손실을 보게 될 위험
- 운영위험 :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 제도나 업무처리 절차, 시스템의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이 초래될 위험

▶ 성과평가

자산운용 프로세스에 따라 산출된 자산운용의 성과를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자산운용 및 보상체계에 반영(Feed-back)하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평가와 병행하고 있다.

▶ 공시 및 의결권 행사

발생주의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고 국제성과평가기준(GIPS)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준용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제반 결과를 공시하게 되어 있다. 공시의 필수사항으로 5년 이상의 기간실적자료, 시간가중수익률 사용, 벤치마크, 레버리지와 파생상품 사용여부, 수수료 포함 여부 등이 있으며, 권고사항으로 독립된 제3기관에 의한 검증, 회사 내부사항(인사이동 등), 위험지표 등이 있다. 특히,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공시하고 있다.

주요 공시사항

- 월간 및 분기 공시사항 : 투자현황 및 투자상품별 운용수익률 등
- 연간 공시사항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연도별 수입지출 및 기금적립현황, 총 투자현황 및 투자상품별 운용수익률, 기금운용지침 등
- 수시 공시사항 : 이사장이 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재정법 제64조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은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 금융자산투자

기금운용규정 제4조와 제16조에 따라, 안정성·수익성·유동성·공공성을 고려하면서 기준수익률 이상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금융자산의 투자 의사결정체계는 위원회(「자산운용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등)와 실질적인 운용정책의 실행을 담당하는 내부 운용조직인 자금운용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단의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 의하여, 금융투자자산은 채권, 주식, 대체투자, 지불준비금 등으로 나누어 운용하게 되어 있다.

▶ 금융자산 배분계획

2023년 자산군별 비중조정 및 허용 범위

(단위 : 억원, %, %p)

구 분		합 계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대체투자
비중 기준	목표비중	100	29.7	11.7	16.4	14.6	27.6
	허용범위		±8.5	±6.5	±6.0	±6.5	±6.5
금 액		83,366	26,510	9,087	14,672	11,422	21,675

* 2022년도 제1회 자산운용위원회('22.4.)에서 확정된 2023년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

2023년 자산군별 목표수익률 설정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채 권	주 식	대체투자	단기자산
운용평잔	83,169	25,020	17,638	22,472	18,039
목표수익	3,637	1,025	918	1,135	559
목표수익률	4.4	4.1	5.2	5.0	3.1

3-2 운용성과

공무원연금기금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말		2023년말	
		금 액	자산대비 비율	금 액	자산대비 비율
자 산	공공기금예탁	-		-	
	금융자산운용	62,163	29.83%	74,704	34.92%
	- 채 권	22,062		24,337	
	- 주 식	15,102		20,999	
	- 대체투자	21,813		21,659	
	- 지불준비금	3,000		7,500	
	- 미수금 등	186		209	
	연금대부사업*	20,531	9.85%	21,016	9.82%
	학자금대부사업	22,720	10.91%	21,033	9.83%
	주택사업	58,285	27.98%	57,815	27.02%
	시설운영사업	12,243	5.88%	12,557	5.87%
	기타사업	32,401	15.55%	26,808	12.53%
	자 산 계	208,343	100%	213,933	100%
부 채	주택임대보증금	18,990	9.11%	22,031	10.3%
	주택도시기금차입금	792	0.38%	831	0.39%
	임대보증금 등	91	0.04%	97	0.05%
	대여학자금수탁금	32,760	15.72%	31,346	14.65%
	부담금 선수금 등	4,534	2.18%	2,942	1.38%
	부 채 계	57,167	27.4%	57,247	26.7%
기 금 총 액		151,176	72.6%	156,686	73.3%
기금증가액		▲ 576		5,510	

* 연금대부사업 : 연금대부자산의 대출채권 잔액 외에도 보통예금 및 미수이자수익 포함된 금액

▶ 금융자산 운용성과

연도별 금융자산 보유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말		2023년말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채 권	국 내	16,742	27.0	18,785	24.0
	해 외	5,320	8.6	5,552	7.1
	전 체	22,062	35.6	24,337	31.1
주 식	국 내	6,985	11.3	10,283	13.1
	해 외	8,117	13.1	10,716	13.7
	전 체	15,102	24.4	20,999	26.8
대체투자		21,813	35.2	21,659	27.7
단기자금		3,000	4.8	11,270	14.4
합계		61,977	100.0	78,265	100.0

최근 5년간 금융자산 수익률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8.0	9.6	8.1	▲ 4.4	9.3

2023 금융자산 세부자산별 평잔수익률

(단위 : 억원, %)

구 분		평잔액	수 익	수익률
채 권	국 내	18,040	1,506	8.4
	해 외	5,357	232	4.3
	전 체	23,397	1,738	7.4
주 식	국 내	7,514	1,842	24.5
	해 외	8,375	1,865	22.3
	전 체	15,889	3,707	23.3
대체투자		21,762	1,555	7.2
단기자금		24,741	942	3.8
계		85,789	7,942	9.3

▶ 연금대출자산 운용성과

연도별 연금대출자산 투자현황

(단위 : 건, 억원)

연도별	대출건수	대출금액	상환금액	대출잔액
2017	46,130	8,000	6,489	14,282
2018	37,419	7,954	7,189	15,047
2019	39,754	7,999	7,045	16,001
2020	38,761	9,000	8,332	16,669
2021	38,385	9,484	6,808	19,346
2022	30,120	7,500	6,339	20,507
2023	34,060	7,500	7,108	20,989

연도별 실적 비교

(단위 : 명,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출인원	60,144	45,241	44,301	37,031	46,130	37,419	39,754	38,761	38,385	30,120	34,060
대출금액	8,898	7,000	6,997	6,300	8,000	7,954	7,999	9,000	9,484	7,500	7,500
운용평잔	12,855	14,529	14,970	15,053	14,256	15,453	15,880	17,095	19,229	20,530	20,675
이자수익	589	594	501	470	477	563	520	509	476	702	935
수익률(%)	4.58	4.09	3.35	3.12	3.34	3.64	3.27	2.98	2.48	3.42	4.52

※ 대출이자율 변동내역(평균이자율)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이자율 (특례)	4.58 (-)	4.08 (-)	3.34 (-)	3.11 (-)	3.33 (-)	3.66 (3.61)	3.45 (3.00)	3.00 (3.00)	2.92 (2.13)	3.98 (2.98)	5.11 (4.11)

* '18.12.부터 특례대출 이율인하

▶ 실물자산 운용성과

- 주택사업

연도별 주택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투자평잔	22,536	22,605	22,614	22,753	23,209	26,250

* 부동산별 최초 취득가액 평잔 기준 작성

연도별 주택사업 투자수익률

(단위 :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 익	724	1,512	1,750	1,864	383	2,022
수익률	3.21	6.69	7.74	8.19	1.65	7.70

* 임대주택 매각 및 재건축 평가이익 포함 수익률임(장부가 투자액 기준임)

- 시설운영사업

연도별 시설운영사업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운영손익	172	207	115	171	263	253
감가상각비	56	69	64	66	62	71
계	228	276	179	237	325	324
취득가평잔	3,435	3,483	3,606	3,609	3,552	3,585
수익률(%)	6.6%	7.9%	5.0%	6.6%	9.2%	9.0%

※ 수 익 : 당기순이익

※ 수익률 : 기금운용수익률 산정지침 제8조에 의한 취득가수익률 (당기손익 + 건축물 감가상각비 ± 자산매각손익) / 취득가평잔

4. 주요 통계



공무원연금 적용대상자 현황

재직공무원 현황

퇴직공무원 현황

연금수급자 현황

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 증감추이

직종별 공무원 현황

연금수급자 추이

연금선택 추이

급여종류별 지급액 추이

공무원연금기금 변동 추이

기금의 자산, 부채 및 자본

공무원연금 적용대상자 현황

(2023년 12월말 기준)



재직자

총 **1,288,301** 명



연금수급자*

총 **660,072** 명



퇴직연금수급자

575,473 명



유족연금수급자

82,910 명



분할연금수급자

1,689 명



부양률(수급자/재직자)

51.2 %

* 장해연금 수급자 제외

재직공무원 현황

(2023년 기준)

- 재직자 수는 1,288,301명이며, 성비는 남자 50.8%, 여자 49.2%로 나타남.
- 현재 재직공무원의 평균연령은 42세이며, 평균 15.4년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남.
 - 10년이상 재직하여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공무원은 59.7%이며,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34.0%임

재직공무원 현황 (2023년 12월말 기준)

재직자수



1,288,301 명

기여금 총액



6 조 1,634 억원

성비율



남 50.8 %
여 49.2 %

직종비율



비교육직 70.8 %
교육직 29.2 %

평균연령



42 세

평균 재직년수



15.4 년

20년이상
비율

34.0 %

10년이상
비율

59.7 %

퇴직공무원 현황

(2023년 기준)

- 퇴직자 수는 **57,163명**이며 성비는 **남자 60.8%, 여자 39.2%**로 나타남.
- 퇴직공무원의 평균연령은 **51.6세**이며, 평균 **23.1년** 재직 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자는 63.6%임.
 - 10년이상 재직하여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공무원은 69.1%임.

퇴직공무원 현황 (2023년 12월말 기준)

퇴직자수



57,163 명

성비율



남 **60.8** %
여 **39.2** %

직종비율



비교육직 **84.4** %
교육직 **15.6** %

평균연령



51.6 세

평균 재직년수



23.1 년

20년이상
비율



63.6 %

10년이상
비율



6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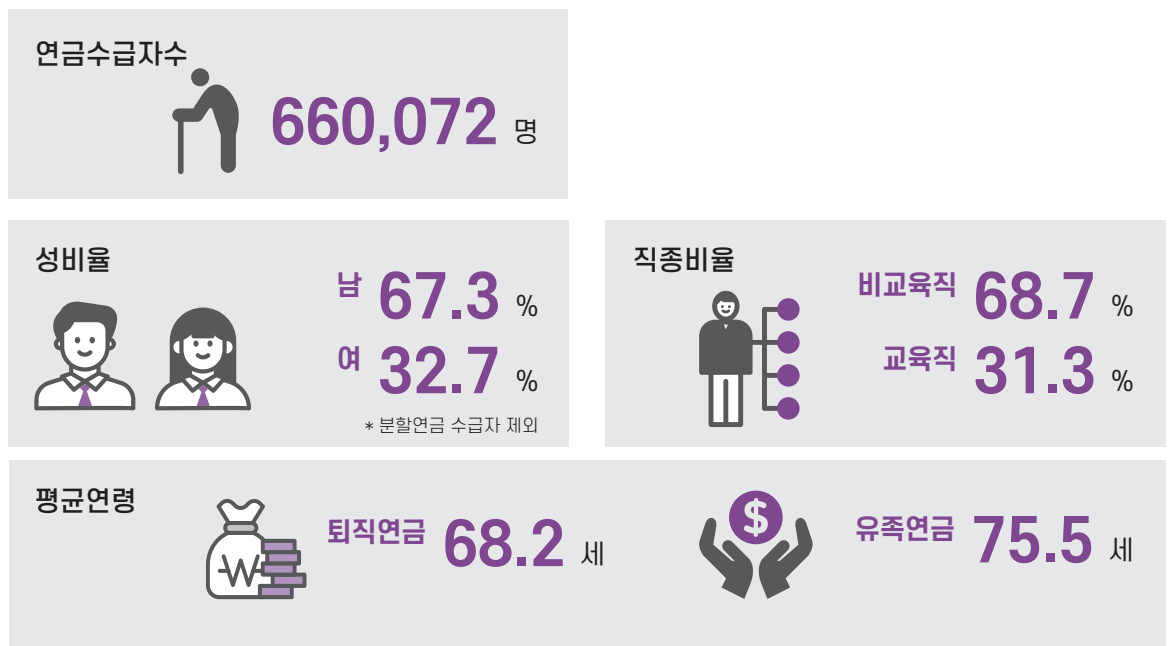
※ 퇴직공무원 : '23.1.1.~'23.12.31. 중 퇴직(사망)으로 급여를 지급한 수임

연금수급자 현황

(2023년 기준)

-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는 660,072명이며 성비는 남자 67.3%, 여자 32.7%로 나타남.
- 퇴직수급자의 평균연령은 68.2세, 유족연금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75.5세로 나타남.

연금수급자 현황 (2023년 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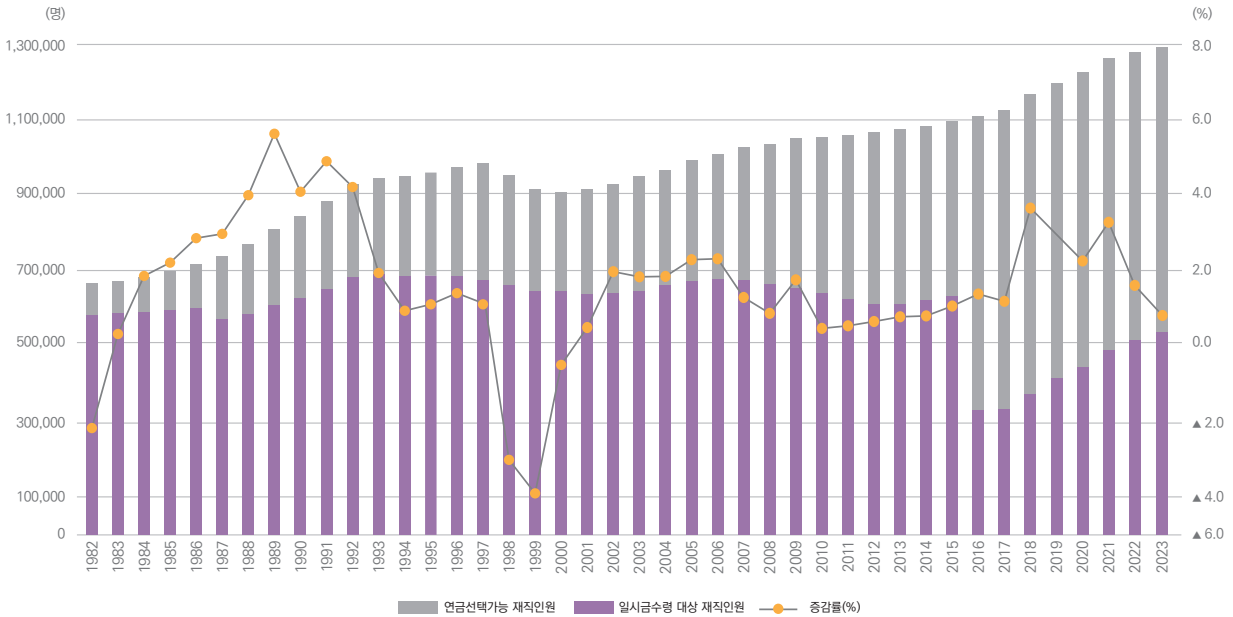


급여종류별 연금수급자 수 (2023년 12월말 기준)



* 장애연금수급자(3,872명) 및 장애유족연금수급자(1,015명)는 제외

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 증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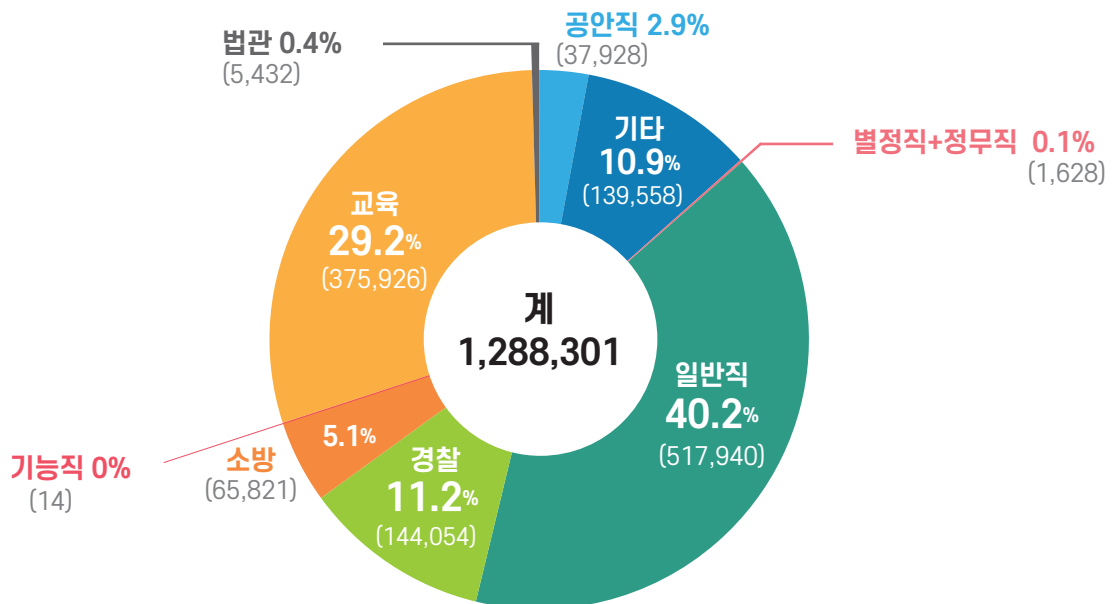
주) 1. 증감률(%) = 증감인원 ÷ 전년도 공무원수 × 100

2. 2016년 연금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금수급요건이 재직기간 10년 이상자로 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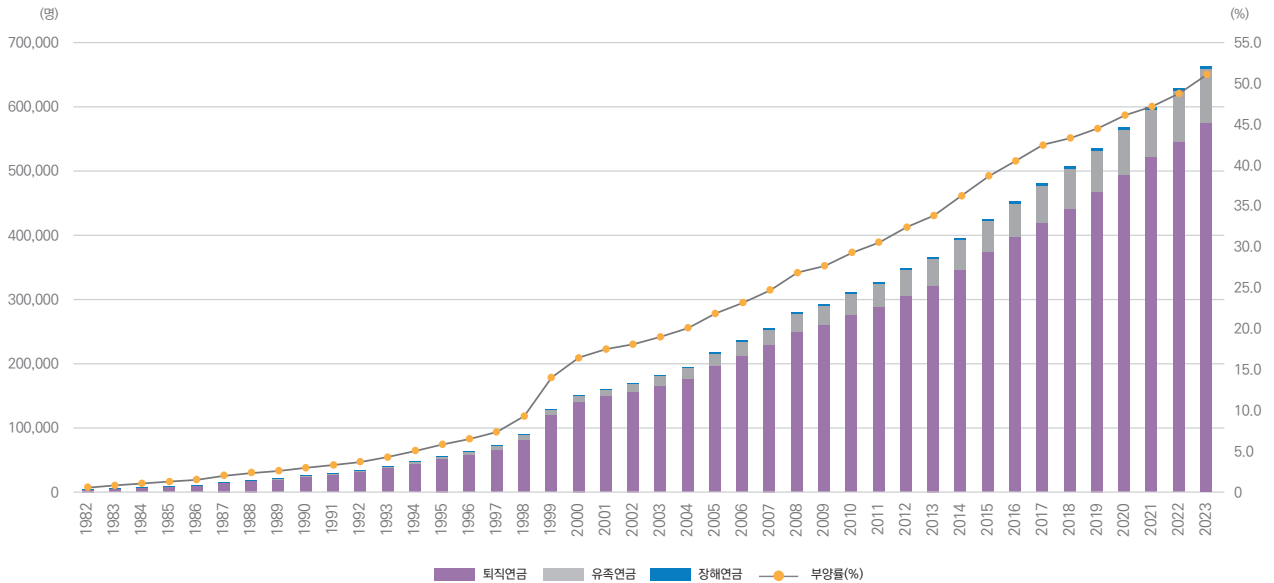
- 일시금수령 대상 재직인원 : 2015년까지는 재직기간 20년 미만, 2016년부터는 재직기간 10년 미만 재직인원임
- 연금선택 가능 재직인원 : 2015년까지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2016년부터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재직인원임

직종별 공무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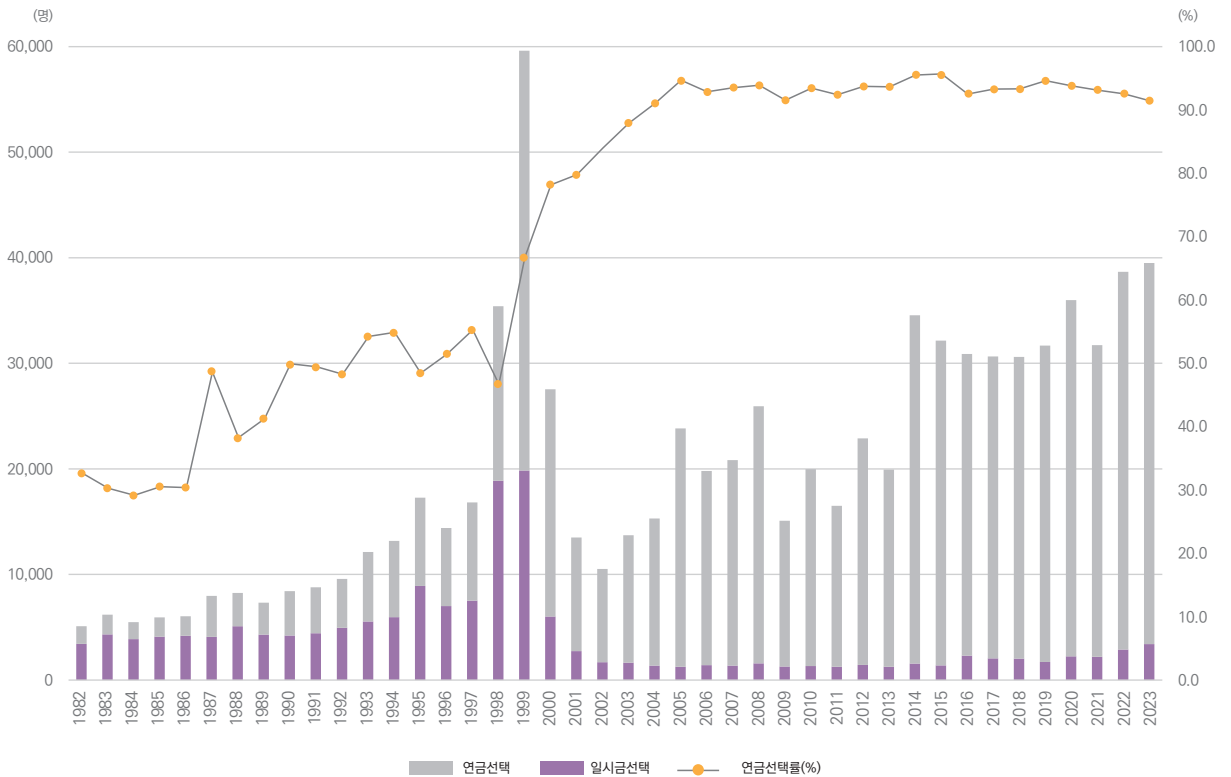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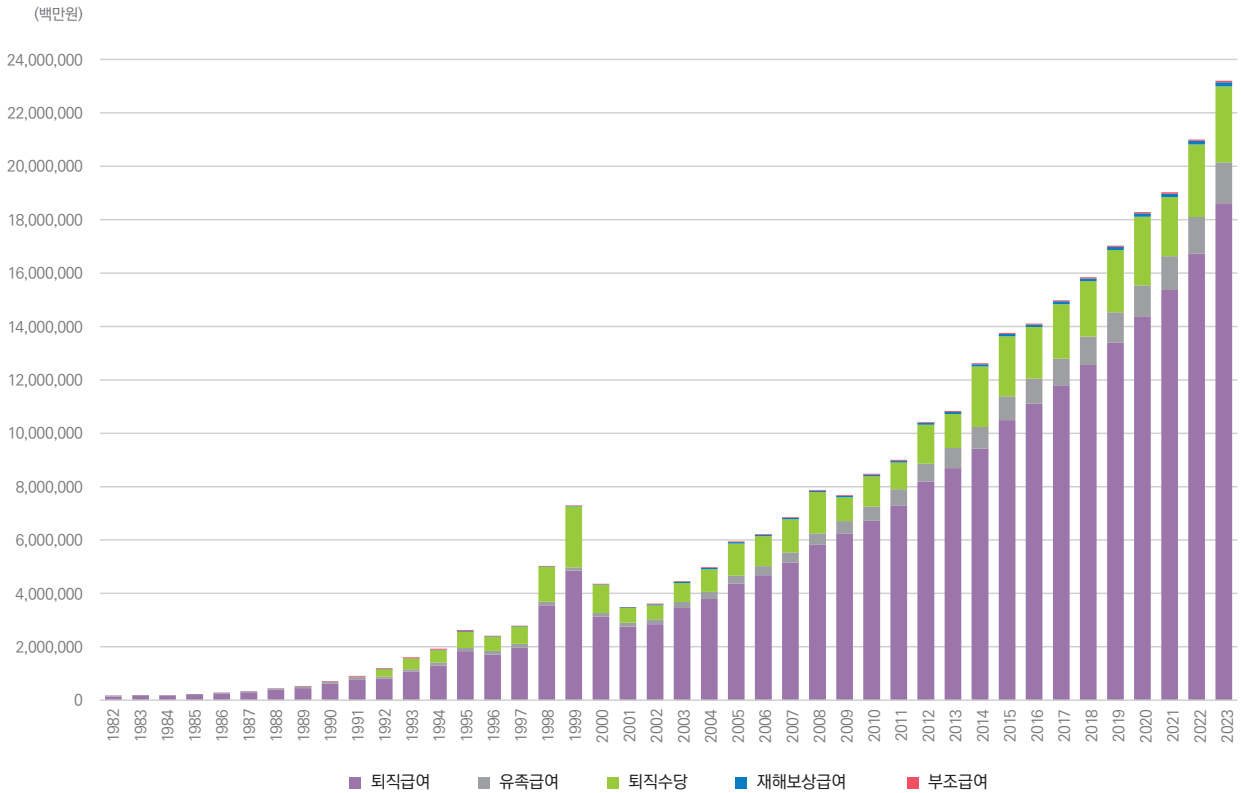
연금수급자 추이



연금선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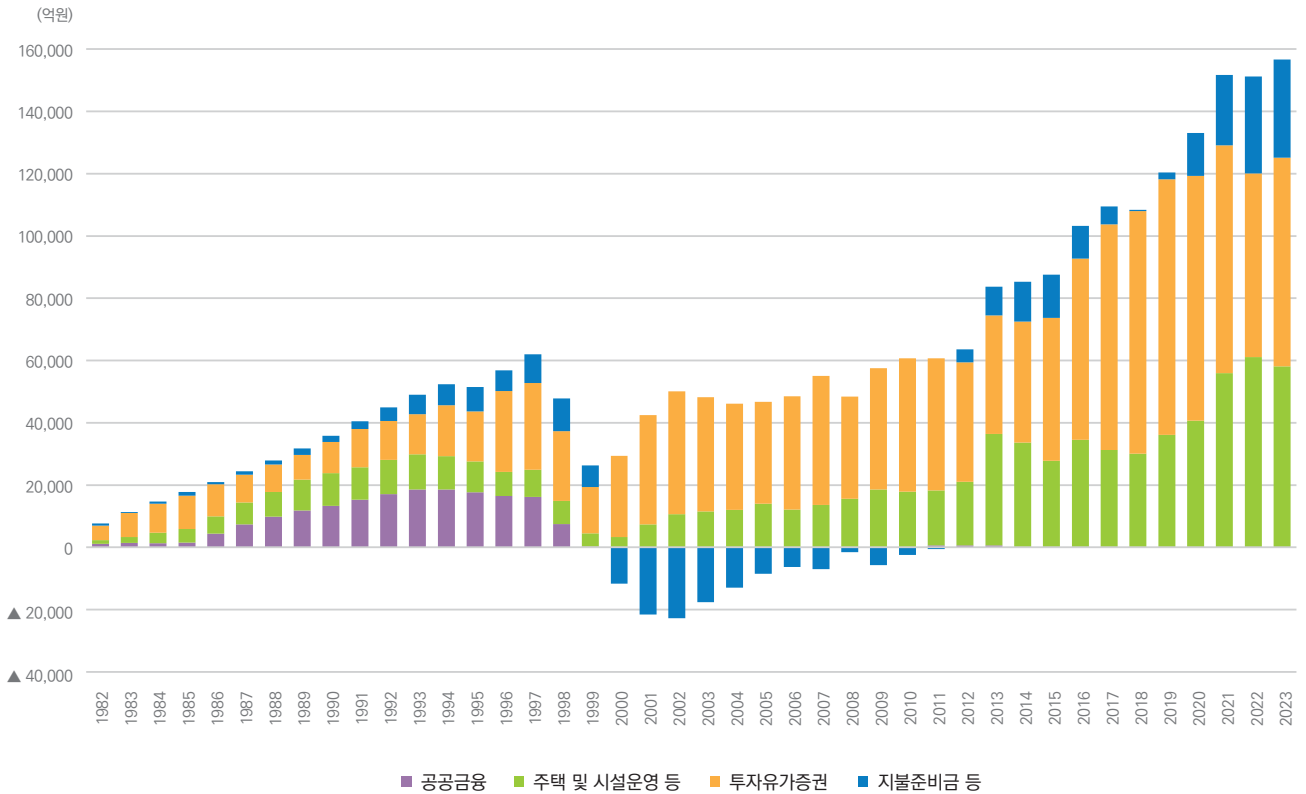


급여종류별 지급액 추이



주) 퇴직급여지급액에는 연금이체급여액 및 분할연금액 포함

공무원연금기금 변동 추이



- 주) 1. 주택 및 시설운영 등에는 용자사업이 포함됨
 2. 2000년 이후 "지불준비금 등"란의 △는 재정자금차입금 및 부담금선수금 등 부채를 차감한 금액임
 3. 2013년 부터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실물자산 시가평가 등 반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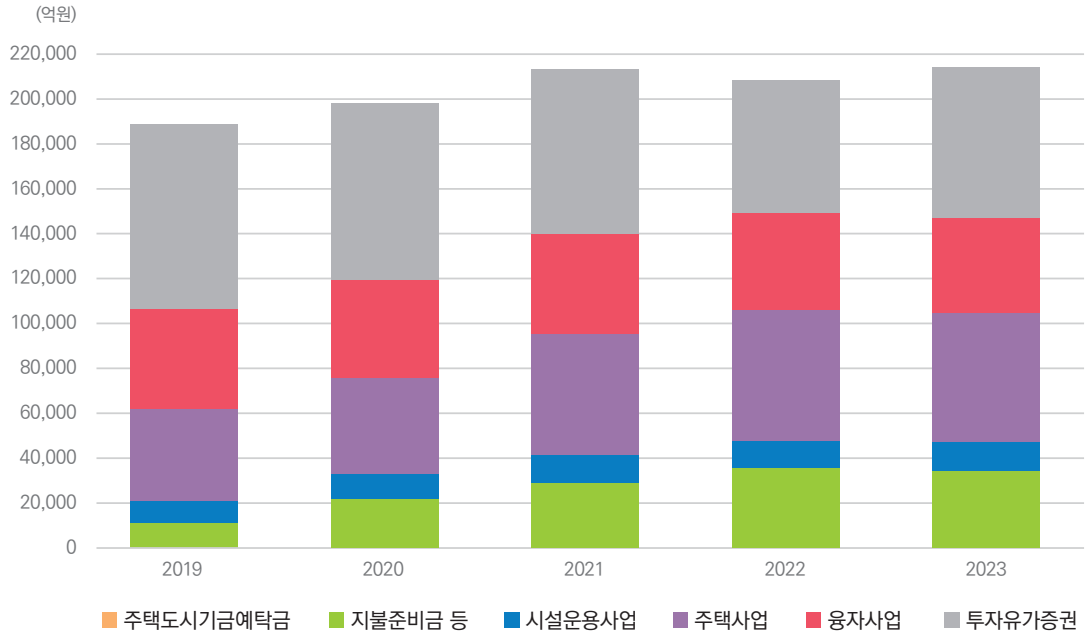
기금의 자산, 부채 및 자본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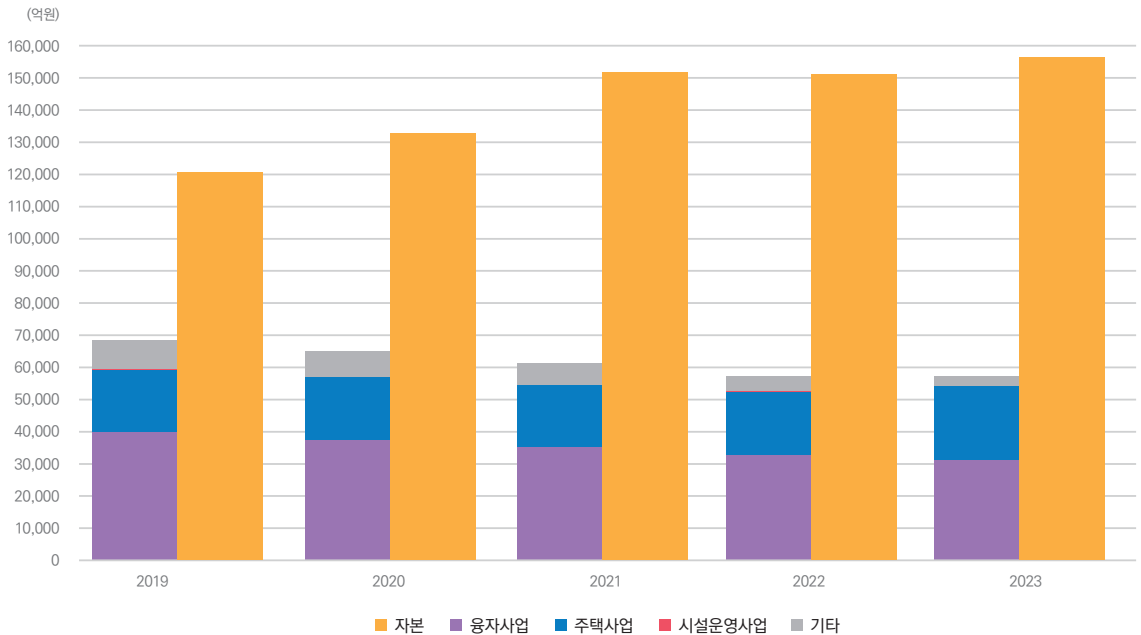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산	주택도시기금 예탁금	100	100	-	-	-
	투자유가증권	82,100	78,566	73,155	58,977	66,995
	융자사업	44,959	43,676	44,209	43,251	42,049
	주 택 사 업	40,634	42,747	54,205	58,285	57,815
	시설운영사업	9,776	11,280	12,267	12,243	12,557
	지불준비금 등	11,201	21,702	29,262	35,587	34,517
	계	188,770	198,071	213,098	208,343	213,933
부채	융자사업 학자금대출	40,049	37,468	35,127	32,760	31,346
	주 택 사 업	19,254	19,548	19,559	19,782	22,862
	시설운영사업	84	80	82	91	97
	기타	8,954	7,888	6,578	4,534	2,942
	계	68,341	64,984	61,346	57,167	57,247
자 본		120,429	133,087	151,752	151,176	156,686

- 주) 1. 자산의 투자유가증권에는 채권·예금, 주식, 신탁상품, SOC투자가 포함되어 있음
 2. 부채의 주택사업에는 주택임대보증금, 주택도시기금차입금이 포함되었음
 3. 부채의 기타는 재정자금차입금, 부담금선수금 등이 포함되었음
 4. 2013년부터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실물자산 시가평가 등 반영) 적용

자산



부채 및 자본



2023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

2023 GEPS ANNUAL REPORT

발행일 2024년 07월 발행

발행인 공무원연금공단

—
인쇄 온디자인(주)

연구-24-1-209

